# 통합원광대, 교육부 글로컬30 사업 선정 전북 교육협치 날개 달다

통합원광대가 이번 정부의 글로컬 30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그간 주력해온 교육협치가 날개를 달게 됐다.

지난해 전북대에 이어 통합원광대의 글로컬 30 사업 선정으로 앞서 진행된 RIS(지역 혁신 사업), RISE(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교육 발전 특구의 연계성과 함께 상호 시너지가 크게 기대된다.

특히, 초·중·고·대학 등 교육 전 주기에 걸쳐 도-시군-교육청-대학-산업체 간 협력 강화의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지역산업과 연계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탄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정책 기조의 변화를 읽어내고 발 빠르게 대응**

이처럼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도가 잇따른 성과를 내는 데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주효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우며 교육 분야의 핵심 키워드로 '지자체의 주도성'을 강조했다. 기존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를 지역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는 취지였다.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에 도는 빠르게 대응했다. 2022년 도지사 취임 후 곧장 '도-교육청-대학 간 교육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이뤄진 도 조직개편에서는 교육전담부서인 '교육 협력 추진단'을 신설했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 강화에 집중했다. '전라북도 대학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도지사와 총장, 도 국장과 대학기획처장, 교육 협력 추진 단장 실무협의체 등 3단 구조의 협력체계를 운영하도록 했다.

연 1~2회 기관장 간의 대면 행사에 불과하던 형식적 소통은 이제 실무진에서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치로 대체됐다. 여기에 전주시와 전북대·원광대·전주대·우석대의 인력이 도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실무단계에서부터 협력과 신뢰를 쌓고 있다.

**▲RIS 사업의 막차 탄 전북, RISE 시범사업의 첫 주역 되다**

교육부 최대 재정지원 사업으로 5년간 1,500억원을 지원하는 RIS에 전북은 2020년과 2022년 두 번의 고배를 마셨다. 2021년에는 공모 신청조차도 하지 못한 아픈 경험이 있었다.

실패의 원인은 소통 부재였다. 인재 양성과 산업혁신을 이끌어가는 주체인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가 동일하지만, 독립기관으로 제각각 활동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

그러나 민선8기 들어 교육 협치가 시작되면서 전북은 RIS 사업의 막차에 기어이 올라탈 수 있었다.

여기에 지자체와 지역대학의 교육혁신 의지와 주도성을 강조하는 교육부와 전북의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지면서 RIS 선정 이틀 만에 RISE 시범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 RIS · 교육발전특구 등 빅4 사업 협업체계 완성
## 지자체-대학 동반성장 · 미래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교육도시 만든다**

도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에도 성공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을 혁신하자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공모」에서 5개 시군(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과 2차 공모에서 6개 시군(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이 모두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특구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됐으며 지역별 맞춤형 교육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최대 화두 글로컬대학 30 사업 2년 연속 선정**

교육협치로 도가 거둔 최대의 성과는 '글로컬 대학 30 선정'이다. 지난해 전북대에 이어 올해 원광대·원광보건대가 글로컬대학에 최종 선정되면서 2년 연속 글로컬 대학을 배출했다.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전북대는 국비 1,000억원을 원광대·원광보건대는 국비 1,500억원을 각각 지원받아 지역대학의 경쟁력 육성에 나서게 된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5년 동안 대학당 1,000여 억원(통합형은 1,500억 원)을 지원해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사실상 대학의 구조조정 신호탄'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지정에 사활을 건 정책이기도 하다.

도는 앞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북대와 원광대에 각각 500억 원, 750억 원의 도비를 5년간 지원해 청년이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전북을 만드는 마중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도지사 "교육협치와 교육협치의 새로운 지평, 전북이 열겠다"**

교육부 공모사업을 석권한 전북은 이제 체감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몰두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된 만큼 앞으로는 지·산·학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 더욱 집중한다.

RIS는 라이즈 체계로 통합해 생명산업과 전환 산업 분야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라이즈도 내년 본격 추진을 앞두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다.

전북대 글로컬 대학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 상생 사업 43건을 발굴해 7월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19건을 선정했다. 검토를 마치는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 지원액을 편성해 주력 대학을 목표로 하는 전북대에 힘을 실어준다는 방침이다.

원광대 글로컬 대학은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대학의 목표와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자치도'의 도의 비전을 동반 실현할 수 있도록 '생명산업'과 관련된 인재 양성, R&D, 산학협력 등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별 지역발전 전략에 걸맞은 인재 양성과 지역에 정주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주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교육 협치가 거둔 일련의 성과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교육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도민의 의지가 모인 결과"라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전북이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만큼 교육혁신과 교육협치의 새로운 지평을 전북이 열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정부, 25년 전 보다 더 떨어진 쌀값 즉각 안정화 시켜라"

## 도의회 농복환위 등 4개 단체 농업 · 농민을 위한 대책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농 전북연맹, 전여농 전북연합, 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 등 4개 단체가 4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쌀값 폭락 저지 등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쌀값 하락과 관련, 농부가 논을 갈아엎는 등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특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정충식 전농 전북도연맹 사무처장의 사회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등 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쌀값 폭락 막아내고 농업과 농민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와 전농 전북도연맹(의장 황양택), 전여농 전북연합(회장 송미옥),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본부장 임만수) 총 4개 단체 임원과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성토했다.

특히 기자회견장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임승식 위원장과 국주영은·권요안·김정수·오은미·이정린(가나다 순) 위원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전농 전북도연맹 황양택 의장은 정부의 쌀값 하락에 대한 무대책을 성토하며,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는 정책은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과감한 정책으로 지금 쌀값 하락을 막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생활은 쌀값 하락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도 했다.

황 의장은 "전농 전북도연맹은 앞으로 9월 10일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확인한 후, 9월 28일 전국 광역대회와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사활을 걸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어서 임승식 전북도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농자재 비료값 등은 몇 배나 오르고 있는데, 쌀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이며, 농도 전북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며, "쌀값 회복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업이 죽으면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죽는다면서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만수 전국 쌀 생산자협회 전북본부장은 "정부에서 올해 공공비축미로 45만 톤을 매입한다."며 "2023년 쌀 5만 톤을 포함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분을 발표하여 정부에서는 용도에 맞지 않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3년 구곡을 포함해서 공공비축미 매입계획을 발표한 것은 국민 기망 행위"라고 말했다.

###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으로 쌀값 하락 막을 수 없어 2023년 구곡을 최소 15만 톤이상 즉각 시장 격리해야"

그리고, "가루쌀 4만 톤도 식용에 포함해 실제로는 지난 해보다 4만 톤이 오히려 줄어들게 생겼으니 더 많은 공공비축미 구입계획을 새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국주영은 위원은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난파선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며, "민족자존의 역사가 허물어지고 한민족 간의 평화를 무너뜨리고 전쟁 고조와 정쟁만이 난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 주체가 대통령이고 정권의 권력자이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파탄 나고 있다는 신호가 사방에서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농업과 농민의 처지 또한 이 나라와 다를 바 없다."며, "1977년 식량 통계 이래 쌀값이 최저로 폭락했던 해가 2022년이었다. 단 2년 만에 다시 역대급의 쌀값 폭락세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2023년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하며 약속한 20만 원 보장은 이미 헛된 공약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23년 10월 5일 한 가마에 21만7,552원이었던 가격이 10개월여 만인 8월 25일 4만원이 넘는 가격 추락으로 인해 17만6,157원이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며, "25년 전인 1999년 한 가마 80kg 수매가가 19만원보다 더 떨어진 참담하고 암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정상적인 나라라면 국민 주식인 쌀 가격 정책을 이렇게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대론 못 살겠다고 아니 살 수가 없다는 농민들의 절박한 비명이 대통령과 정부 관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가?"라며, 목청을 높였다.

국주영은 위원은 "정부의 개방 농정에 의해 매년 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쌀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해 시장에 농산물이 과잉 공급되고 가격 하락을 불러왔다."면서, "게다가 매년 치솟는 농업생산비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농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이런데도 한우, 마늘, 양파의 가격 폭락을 부르는 무분별한 수입은 말할 것도 없고, 51개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이 나라 농업과 농민들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미옥 전여농 전북연합 회장은 "쌀값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농업의 중심인 쌀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른 농산물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대로 가다간 농민만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가 함께 험한 꼴을 당하게 생겼다."면서, "대통령과 정부는 역사 이래로 농업이 무너지면 나라와 정권이 쫓겨나고 무너졌음을 모르는가?"고 주장했다.

이어서 "농민들에게 숨통이 트이고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4차례에 걸쳐 2023년 구곡을 5만 톤씩 시장 격리해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방법은 시장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제 해결책은 '일시에 많은 양을 시장격리' 해서 쌀값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2023년 구곡을 최소한 15만 톤 이상, 가능하면 20만 톤을 시장 격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미 전북자치도에서는 2024년 조생종 수확이 시작되었다."면서, "쌀값을 안정화하고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는 농민과 농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2024년 수확기 쌀값이 최소한 20만원부터 시작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는 2023년 구곡을 최소 15만 톤 이상 즉각 시장 격리하라"면서, "정부는 시장 개방과 쌀수입 농업 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지켜본 한 도민은 "농업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국민의 모든 삶의 근본인데, 너무 정부에서 무신경하게 쌀값 하락에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식량안보와 자주권 차원에서라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친족 간 유대관계 해친 범죄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

## 민주 윤준병 의원, '박수홍법' 대표 발의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존치됐던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친족상도례)' 조항이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친족상도례 폐지법(박수홍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제328조를 비롯해 제344조·제354조·제361조·제365조 등을 통하여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친고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현재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직접 했다고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동거친족·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2020헌마468등).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의원은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옛 금암고 일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환영"

## 민주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은 전주시 금암동 옛 금암고 일대(앞금암마을)이 2024년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 선정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2010년 폐교 이후 도심 속에 장기간 방치된 전주 금암동 옛 금암고 일대의 골목길과 주거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옛 금암고 일대(앞금암마을)에 국비 50억원을 포함한 83억 원을 투입해 '안전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앞금암 거북바우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동영 의원은 "옛 금암고 일원은 폐교 문제 뿐만 아니라 급경사지에 좁고 긴 골목길과 노후주택이 밀집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